

건신인권센터 운영 규정 시행세칙

2022년 11월 0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건신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30조에 따라 센터 운영과 본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침해예방 및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관련자 보호) ① 사건당사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사전에 통보한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② 제3자인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제3조(신고 접수 등) ① 건신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피해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담을 통하여 침해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건의 접수 및 조사·처리 과정에서 센터는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사건당사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소속부서 또는 교내·외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③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센터장은 피해자와 피신고인 간 또는 피신고인 간의 격리, 피해자의 학습권이나 근로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치를 소속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2. 수강과목 변경
3. 지도교수 변경
4. 근무부서 변경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4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과 운영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사건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와 관련자료 제출 요구
2. 사건관련자 또는 소속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사건관련자 또는 소속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전문인력이 사건관련자를 조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인 1조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 ④ 조사 시 그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녹화할 수 있다.

제5조(조사중단) 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센터의 조사만으로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은 수사결과 또는 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교외 절차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소환 방법) ① 사건관련자에 대한 소환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하며, 본인에게 당해 사건관련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소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조정)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운영위원회의 회부 전에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결정할 때는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한다.

② 조정동의서와 조정안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③ 센터는 피신고인이 제1항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한다.

④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합의사항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심의·의결) ① 조사 시 센터의 전문직원은 사건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최종조사 및 심의까지의 기간은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의 내용은 기록하거나 녹취·녹화할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의 위촉과 교체)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위원을 위촉하거나 교체 할 수 있다.

제10조(조치의 이행) ①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진행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가 정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프로그램 진행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가 정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회복 및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침해행위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사항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회의비) 센터는 운영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 위원과 외부전문가에게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자문·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부전문가) 규정 제9조 제2항과 이 시행세칙 제3조 제2항의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전임교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13조(기록 및 자료 보존) 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교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